

“**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**”

# 국민의 소리

**국민권익위원회**  
2024년 4월 4주차 주간동향(4.22.~4.28.)

[2024.5.2.(목), 제764호]

## 이슈 키워드

일반민원			온라인 여론		
순위	키워드	민원건수	순위	키워드	언급량
1	교통 단속 민원(불법주정차 신고 등)	113,233	1	지원금(전국민 25만원 지원금)	25,451
2	영통 소각장(대보수 반대)	1,946	2	민생(영수회담 의제 관련)	14,788
3	△△구 생활형숙박시설(용도변경, 대출문제 등)	1,352	3	물가(생산자물가지수 4개월째 상승)	13,043
4	통학버스(○○시 ●●초 통학버스 운행 요구)	1,217	4	의대 정원	11,959
5	불법광고물(전단지, 현수막 등 신고)	1,102	5	국민연금(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토론회)	10,490
6	재개발(□□시 ○○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)	998	6	영수회담	10,411
7	◆◆도 교육청(◇◇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)	936	7	저출산(2월 출생아 2만명 첫 붕괴)	7,200
8	▼▼신도시(아파트 공사 주민 불편 해소 요구)	762	8	G7(정상회의 참석 무산)	4,472
9	제2경인선(사업 조속 추진 요구)	490	9	우주항공청(초대 청장 임명)	852
10	위례신사선(조속 착공 요구)	299	10	방사포(北 초대형 방사포 동원 전술핵 훈련)	833

※ 일반민원: 국민신문고,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(4.22.~4.28.)  
온라인 여론: 문체부 제공 자료(4.19.~4.25.)

※ 4월 3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: [키워드] / 탈락 키워드: 경의중앙선, 공항버스 신설요구 등

## 민원 동향

- 4월 4주차 민원은 267,366건(일평균 37,195건)으로 지난주(257,093건) 대비 1.03% 증가 ※ 안전신문고(61.5%), 국민신문고(21.8%), 새을 등(16.7%)
-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강원(8.0%), 전남(6.6%) 등 증가한 반면, 전북(5.6%), 경북(4.1%) 등 감소
- 분야별로는 ◆◆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등 주택·건축 분야, 성매매 업소 광고 전화번호 차단요구 등 방송·통신 분야 순으로 증가



## 주요 민원

### □ 교육공무직 장기 재직 휴가 신설 요청(191건)

- ☆☆도교육청이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'장기 재직 휴가'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개정을 추진
  - 해당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장기 재직 휴가를 함께 적용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제기

■ **검토요청** 교육공무직 조례를 개정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가 핵심입니다. 노력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1년 넘게 어기고 있는 도교육청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우선 장기재직휴가를 예로 들겠습니다. 교육공무직이 학교 주체로 근무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. 장기간 재직하며 우리 교육공무직도 휴가가 필요합니다. 교육공무직은 왜 장기재직휴가를 주지 않는지요? 이것도 엄연한 차별입니다. 교육공무직은 10년을 근무해도 20년을 근무해도 장기재직휴가가 단 하루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. 지방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었는데 왜 교육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는지요? 이것도 엄연한 차별입니다. 교육공무직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차별 해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4.26.)

### □ 온라인 성매매 업소 광고 전화번호 이용 차단처리 요구(79건)

- 경찰청에서는 불법 성매매 광고행위를 제보할 경우 성매매 업소 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차단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  -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온라인 성매매 업소 광고에 여전히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차단처리를 요구하는 민원 제기

■ 온라인 성매매 업소 광고에 대한 전화번호 차단신고를 하다보니, 왜 전화번호 차단시스템에 등록된 온라인 성매매 업소 광고 전화번호가 몇달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요? 일부 전화번호는 이미 2022년에 시스템에 등록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당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여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(4.24.)

## □ ◆◆시 □□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민원(1,237건)

-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게 설계된 숙박시설로 '21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 사용을 금지, 주거용으로 활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('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유예기간 지정)
- 현재 입주를 앞둔 전국 상당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상대적으로 건축 기준이 까다로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관련한 민원, 소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
- ◆◆시 □□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△준주거 허용 요구, △분양시 실거주 불가 관련 사전 미안내 신고, △대출여건 완화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민원 다수 제기

- 처음에 제가 분양 받을 때 상담사분 말로는 대출이 80퍼센트 나올거라고 하여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때에는 직접 거주도 가능하다고 안내 받아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은행들이 생활형 숙박 시설을 위험자산으로 평가해서 잔금을 치를 대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. 지금 뉴스에서 보면 ★★지구 생숙 같은 경우 입주시기가 다가왔지만 대출이 20~30% 밖에 나오지 않으며 그것도 1금융권에서는 받을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. 생숙의 준주거를 허용해주세요. (4.28.)
- 분양 당시 직접 거주가 가능하다고 분양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분양 받았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, 법적으로 불가하며, 실거주시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다수에 전국 생숙단지들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일부 몇 단지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고, 대다수 단지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본 단지도 지구단위계획 변경(오피스텔 용도변경)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. (4.24.)

【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언론 보도】	
<p><b>“곧 입주해야 하는데”...준주택 vs 숙박업, 막막한 생숙 수분양자</b></p> <p><small>입력 2024.04.26 08:22 수정 2024.04.26 08:22   임정희 기자 (ljh@dailian.co.kr)</small></p> <hr/> <p><small>수분양자 “은행 대출 막힌 생숙...잔금납부 불가능” 준주택 인정 논의 요원, 국토부 “오피스텔 건축기준 충족해야” 시행사-시공사 상대로 소송전 비화, “장기 숙박 상품으로 판매”</small></p> <p><small>▶거주 목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(생숙)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준주택 인정 요구와 시행사-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. ©한국레지던스연합회</small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건설사·시행사 책임으로 번지는 ‘생숙 사태’... “수분양자 유사소송 잇따를 듯”</b></p> <p><small>이행강제금 유예 만료 기간 연말까지 수분양자들, 소송 제기 “확인서 받았다” vs “기습적 약관은 무효”</small></p>
데일리안('24.4.26.)	조선비즈('24.4.25.)

# 알림판

## 1.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

‘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’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(www.pias.go.kr)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,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,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.

### <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>

페이지	제목	민원번호	소관기관
2P	교육공무직 장기재직 휴가 신설 요청	1AA-2404-1024155	경기도교육청

- ※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·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(044-200-7418, 7321) 바랍니다.

## 2.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

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·제안 및 외부게시판·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(AI)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(www.pias.go.kr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민원업무 기관 담당자,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www.pias.go.kr(업무망)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‘사용자 계정신청 안내’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✓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(070-4108-3625)로 문의 요망